

2020년 2월



문재인정부 실정 보고서

제 1 권

대통령의 거짓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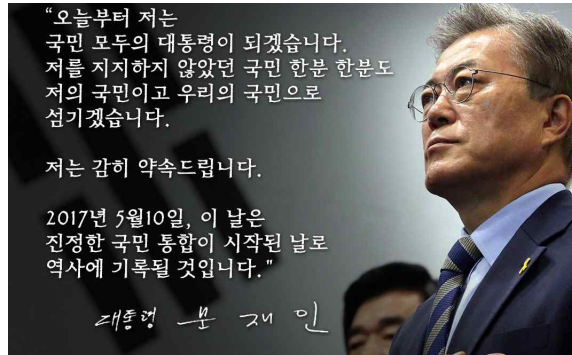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대통령의 거짓말

문재인은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취임사에서 문 대통령은 많은 약속을 하였다.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고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통령을 경험하였다. 취임사를 다시 읽어보면서 문 대통령이 당시에 무슨 약속을 했고 그 뒤 무슨 일을 벌였는지 네 가지만 짚어보자.

첫째,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당시에 국민 대부분은 정권초기의 연례행사였던 정치보복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국민통합의 시대가 열리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벌써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된 날짜가 1,000일을 넘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 349일 만에 지금까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상당수의 전 정부의 인사들을 구속수감하였다. 더욱 참혹한 정치보복의 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둘째,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이 말에 국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처럼 즉흥 연설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기자회견도 자주 할 줄 알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뜸했고 그마저 연출된 것이어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웠다. 더구나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국정운영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도 대통령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연출된 소통의 불통시대가 열린 것이다.

셋째,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취임사를 끝내기 무섭게 대통령은 적폐청산작업에 돌입했고, 여당의 대표는 보수세력을 궤멸의 대상이라고 몰아부쳤다. 20년 내지 50년 집권하겠다는 호언장담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난 연말에는 제1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소야당과 맺은

4+1이란 정체불명의 정치연대로 ‘연동형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분열과 갈등보다 더 무서운 정치독선의 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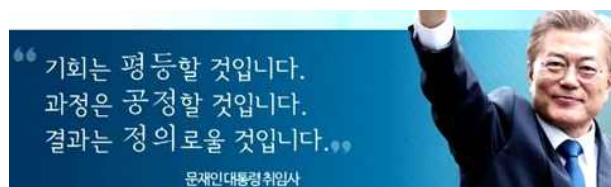
넷째,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은 집권정당을 통해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틀어쥐고 있는 대통령이다. 그런데 문대통령은 사법권마저 틀어쥐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자기 사람들로 채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검찰, 법관, 고위 경찰, 국회의원, 장성 및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이 모두 벌벌 떨게 될 것이다. 그들의 범죄혐의 모두를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나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貪污調查局)과 전혀 다르다.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절대 권력기관이 될 공수처는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나 북한의 국가보위성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이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기관은 어디에도 없다.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국민의 피어린 저항권뿐이다. 국민의 피를 부르는 시대가 되었다.

대통령은 취임사 첫머리에서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라고 선언하였다. 당시에 모두들 고개를 갸우뚱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지금 돌이켜 보면, 참혹한 정치보복의 국가, 연출된 소통의 불통국가, 무서운 정치독선의 국가, 국민의 피를 부르는 국가가 바로 그런 나라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취임사의 약속이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면, 대통령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진심이 그런 것이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

결과가 정의로우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해질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정사회에 대한 포부를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상식적인 절차적 공정원칙을 떠올렸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면, 자유롭게 경쟁한 결과는 당연히 정의로우리라는 믿음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와 달리 생각한 것 같다.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면, 과정을 뜯어고치고 기회부여도 달리해야 한다는 믿

음이다. 시대착오적인 결과적 공정원칙인데, 권력화되면 곧바로 폭력화된다. 권력자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내놓지 않는 과정과 기회는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처리방식을 보면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조국의 자녀는 입시전형에서 부정합격하였다. 조국의 딸은 고려대의 입학전형에서 단국대 및 공주대의 영터리 인턴경력을 사용하였다. 단국대에서는 고1 때 고작 2주간의 인턴활동으로 당시 SCIE급 의학논문에 뜬금없이 제1저자로 등재되었고, 공주대에서는 고3 때 3주간의 인턴활동으로 국제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에 제3저자로 등재되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할 때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허위 장학증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활동증서, 법무법인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명문대학이나 명문대학원에 합격한 자녀가 특권층이었다고 해서 입시전형이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 특권층의 자녀만 응시하게 했거나 특혜를 주지 않았다면 자유경쟁의 전형결과는 언제나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로 등재된 자료나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여 합격했다면, 특권층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다.

조국장관 자녀의 부정행위가 문제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도 없이 다짜고 짜 입시개편안을 주문하였다. 교육부는 그동안 성적 일변도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우선 고려하는, 소위 학생종합부 위주의 수시 전형에 무게를 싣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론화과정도 거치지 않고 교육부는 난데없이 입시제도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대통령의 대학입시 개혁요구는 모종의 결과적 공정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대통령은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학생종합부 반영비율이 높았던 게 핵심적인 문제였다"며 반영비율을 낮추는 입시제도를 요구했다. 수시가 정시보다 비중이 높은 것을 문제점으로 보았다면, 대통령이 보는 공정한 입시제도는 수시와 정시의 비중이 같은 것이다.

입시제도의 공정성은 자유경쟁이 확보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자유로운 경쟁으로 치러졌다면 수시비중이 높은 정시비중이 높은 상관없다. 부정행위로 자유경쟁이 훼손되었다면 처벌을 강화하면 된다. 대통령이 갑자기 입시제도를 문제삼은 것은 마치 조국자녀의 비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입학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과 다름없다. 수시비중이 낮았다면 조국자녀와 같은 비리는 적어졌을 것이고, 어쩌면 조국자녀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사실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회복하려면 조국자녀의 입시비리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벌하면 된다. 그런데도 검찰의 조국수사를 ‘작은 흠을 부풀린 표적수사’라는 구실로 ‘조국수호’의 집단시위를 한다든가, "모든 학부모가 당시에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라면서 조국가족을 옹호하는 것은 문제의 초점을 흐리는 일이다. 자기 진영의 인사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주관화된 결과적 공정원칙이 원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공정사회의 비전도 제시했다. 그러나 자기 진영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과정의 공정성과 기회의 평등성도 파괴하는 독재적인 폭거로 귀착되고 있다. 특권과 반칙이 정의로 미화되는 전체주의적 사회가 빼꼼이 얼굴을 내밀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취임 100일 쯤의 ‘국민보고대회’에서였다.

“이제 국민은 주권자로서 평소에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국민이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직접 민주주의’ 강조

신고리 공론조사 비롯한 직접 민주주의 정책 확대 시사
야권은 “국회 무시한다”며 반발

사진: SBS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대국민보고'

대통령이 말하는 직접민주주의는 듣기에 무척 달콤하다. 그러나 찬찬히 따져보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전체주의 독재의 냄새를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던 것은 ‘촛불 혁명’으로 새 정부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2016년 말에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쳤던 촛불집회를 직접민주주의로 이해하고 있다. 만일 당시의 촛불집회가 직접민주주의였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시민으로부터 직접 추대되어 취임했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로 당선되어 국회의사당의 로텐더홀에서 취임하였다. 선거는 간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정치기제이다.

촛불집회와 같은 광장의 정치는 직접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부분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듯, 광장의 집회 참가자가 국민전체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서로 대립되는 집회가 열리면 어느 집회도 국민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어느 한 집회의 정치의사가 국민전체의 정치의사로 간주된다면, 그 순간 곧바로 독재가 시작된다. 부분의지를 일반의지로 승격시킬 수 있는 민주적인 정치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재자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독재란 바로 국민 일부의 정치의사로 국민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다.

작년 10월에 법무부장관 조국의 사태로 말미암아 검찰중립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서초동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다. 서초동 집회는 정권을 옹호하는 군사독재의 ‘군중대회’ 같았지만, 광화문 집회는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저항권의 ‘촛불집회’ 같았다. 대통령은 대립된 광장정치를 “국론의 통일과정”으로 보면서도 끝내 서초동 집회에 손을 들어주었다.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독선적인 정치과정이 급물살을 탔다. 작년 말 고위공무원범죄 수사처법(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은 제1야당의 극렬한 반대농성을 짓밟고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3권 장악을 확보하는 절대권력기관이고,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해주는 선거제도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완강한 반대가 있으면 의안처리를 미룬다. 강력한 반대는 국민저항권의 함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민주화에 앞장섰던 문재인 정권에서는 도리어 독선적인 정치과정이 계속되고 있고 전체주의 독재의 문턱까지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한 나머지, 건군(建軍) 70주년을 기념한 2018년 8월의 국제관함식(觀艦式) 개최도 ‘동네 투표’로 결정되었다. 해군기지가 있는 제주 강정마을의 주민 총회에서 ‘허락(?)’을 받은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직도 경상북도 성주의 사드기지를 드나드는 차량은 모두 시민단체의 검문을 받고 있다. 사드기지 요원은 식재료를 비롯한 생활용품을 헬리콥터로 공수하고 있다. 주요 언론기관은 노조에 장악되어 데스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민주노총의 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부분이 전체를 장악한 전체주의적 참상들이다.

국민 일부의 정치의사로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 직접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선동적인 정치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치미래가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국민이 각성하지 않으면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법의식은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법대를 나왔고 법무법인의 대표를 지낸 변호사 출신이다. 그런 만큼 대통령의 법의식은 각별하리라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 가을의 조국 사태와 이번 연 초의 검찰인사논란을 보면서 과연 대통령의 법의식이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각종 의혹에 휩싸여 수사대상에 올랐던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법무부 장관과 같은 고위공직은 위법행위가 없더라도 도덕적 흠결이 많으면 임명될 수 없는 자리이다. 정부부서를 제대로 이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신뢰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비난이 쏟아질 뿐만 아니라 수사대상에게까지 올라있는 인사를 임명했던 것이다. 결국 국민의 거대한 분노에 부딪쳐 취임 35일 만에 내려오자, 조국의 임명 사례는 나쁜 선례가 되고 말았다.

조국의 임명논리에서 보듯 대통령의 법의식은 공허하다. 내재적인 도덕성을 꿰뚫지 않고 외재적인 위법성만 따지려 했으니 말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듯, 외재적인 법이 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내재적인 도덕성이다. 대통령이 정상적인 법의식을 가졌다면,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을 가늠했을 것이다. 더욱이 수사대상에 이미 올라있음에랴.

대통령의 법의식은 각료의 법의식을 결정한다. 최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연출한 검찰의 인사대란은 대통령의 법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막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느닷없이 윤총장의 법무팀을 "학살"했던 것이다.

대통령의 법의식이 모순적으로 드러난 셈인데, 점점 점입가경에 접어들고 있다. 검찰청 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를 단행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인사발령을 냈다. 불법논란이 일자, 장관의 호출에 응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검찰총장을 항명으로 몰았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인사내용을 미리 받아보고 의견을 내려고 하였지만, 법무부 장관은 그럴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열기 30분 전에 다짜고짜 불러들이려 했던 것이다. 검찰청법의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충족시키려

는 수작이었다.

대통령의 공허한 법의식은 이렇게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 언제부터 대통령은 이런 모순적인 법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랬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럴수록 고질적일 터이니까 말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던 때였다. 당시에 더불어 민주당의 상임고문이었던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의 뜻이 대통령의 즉각 퇴진으로 모아져 있는데도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지 못한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헌법기관인 국회를 겁박하기까지 하였다. “탄핵을 무산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아무리 정치적인 발언이라 할지라도, 헌법기관을 겁박하는 주장은 지나치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문제가 헌법재판소에 올라있을 때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면서도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아리송한 말만 되풀이 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도 승복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 편에 서서 반대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하다. 아마도 ‘탄핵이 인용될 때만 승복하겠다’는 말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조건부 승복에 불과하다. 헌재 결정의 헌법적 권위를 충분히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

대통령의 법의식에는 법의 실질적 의미보다는 형식적 의미만 살아있고, 보편적 권위로 보다는 권력의 수단으로 각인되어 있다. 서양의 자연법 전통보다는 동양의 법가적 전통에 가깝다. 법가의 한비자는 법을 전제군주의 통치수단, 다시 말해서 폭력수단으로 설파한다. 대통령의 법의식이 걱정스러운 까닭이다.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독재화될 위험성이 크다.

눈만 뜨면 헛발질, 입만 열면 거짓말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남북대화를 제안하고 접경지역 협력도 제안하였다.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라면서 북한에 대한 각별한 신뢰도 표현하였다. 그러나 되돌아온 것은 “설레발치지 말라”는 막말이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지난 11일 “바보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까지 조롱했다. 연초부터 대통령의 헛발질에 김정은의 막말이 시작된 것이다.

임기 반환점을 돈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대통령은 그동안 눈만 뜨면 헛발질을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왔다. 왜 그리 헛발질이 많은지, 왜 그리 거짓말이 많은지는 이제 미스터리도 아니다. 원래 무능해서 헛발질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 정권을 유지하려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와, 헛발질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거짓말로 “여지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란 견해가 대립되고 있을 뿐이다. 어느 견해가 맞는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이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기는 어렵지 않다.

돌이켜 보면 대표적인 헛발질은 소득주도 성장정책,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4대강 보 철거, 부동산가격 억제 등등 이루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경제양극화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 또는 52시간 근무제는 도리어 경제양극화를 악화시켰고 경기침체로 일자리도 줄이고 말았다. 탈원전 정책이나 4대강 보 철거계획은 모두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지만, 친환경에너지로 개발된 태양광은 오히려 급속히 환경을 파괴했고, 4대강 보 철거는 농민들의 반대로 엄두도 못 냈다.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은 도리어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아 서울 강남의 부호들이 환호하고 있는 지경이다.

손만 대면 헛발질이니, 대통령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작년에 했던 거짓말만 추려도 한광주리에 넘칠 정도다. 작년 1분기에 16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도 대통령은 ‘한국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원자력발전이 위험해서 탈원전을 한 다면서도 다른 나라에 가서는 ‘한국 원전은 40년 동안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며 자랑하거나, 작년 한 해에만 탄도미사일을 10번 이상 쏘았는데도 유엔총회에 가서는 ‘북한은 작년 9·19 군사합의 이후 단 한 번의 위반사례도 없었다’고 거짓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작년 10월 시정연설에서는 지난해보다 전체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노인 및 단기 일자리만 늘어나는 “고용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비정규직이 포함된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올라간 것만 보고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는 초현실적인 주장을 내놓기도 하였다.

정책효과에 대한 거짓말은 체제문제에 대한 거짓말에 비하면 애교로 봐줄 수도 있

다. 올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작년 연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득의양양해 하였다. 공수처법은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자랑한 것이다. 고위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설치되면, ‘고위공무원 같은 특권층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특권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달콤할지 모른다. 물론 공수처는 판사, 검사, 고위경찰, 장군, 국회의원,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그런데 공수처가 설치되면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통합한 어마어마한 절대권력이 대통령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숨겼던 것이다.

이제 겁도 나지 않는 모양이다. 취임 초기만 해도 3권 분립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2017년 5월에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했던 모습은 헌법에 정해진 삼권분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당연히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제 와선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및 범여권 군소정당의 정치연합인 '4+1'을 앞세워 입법부를 좌지우지하고, 공수처라는 절대권력기관의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도, 권력기관 독립 및 중립의 원칙도 모두 무너지게 된 것이다.

공수처가 자신의 절대권력기관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 알면서도 천연덕스럽게 일반서민을 위한 것인 양 위장논리를 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동안 벌여놓은 적폐가 넘치고 있으니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면 절대권력을 확보해야한다고 여길지 모른다. 이만만 해도 대강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는 차치하더라도 국가체제 자체를 무너뜨린 것이 자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것이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체제로 바꾸려는 것이라면, 공수처법과 연동제법은 헌법개정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에 지나지 않는다.

올 4.15총선에서 자유우파가 개헌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하면 합법적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적 전체주의 국가로 바뀌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히틀러의 망령이 하늘을 떠돌고 있고, 호국영령들의 호곡소리가 들판을 메우고 있다.

자유애국시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이다.

與 개헌안, '자유민주적'에서 '자유' 뺐다



[조선일보]